

# 2020년 서울시(속기직 등) 사회 문제 및 해설(B책형) (2020.06.13.)

정치와 법 2~3, 7~10, 14,  
17~18번(9문제)  
사회·문화 1, 4~6, 11번(5문제)  
경제 12~13, 15~16, 19~20번(6문제)

1. <보기>의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 기>

환경부에서 ㉠ 멸종 위기 야생 생물로 지정한 열목어는 연어과의 민물고기로 ㉡ 산란기가 되면 온몸이 짙은 홍색으로 변한다. 열목어 개체 수가 급감하자 여러 기관에서는 인공 증식한 열목어를 방류하는 등 ㉢ 열목어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① ㉠과 같은 현상은 물가치적, ㉢과 같은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 ②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③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 ④ ㉠과 같은 현상은 ㉡, ㉢과 같은 현상과 달리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정답] ②

[출제단원] 사회·문화 - I.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자연 현상 vs 사회·문화 현상

| 출제 가능 지수 |  |  |  |  |  |
|----------|--|--|--|--|--|
| 난이도 지수   |  |  |  |  |  |

㉠과 ㉢은 사회·문화 현상, ㉡은 자연 현상입니다.

- ① (X)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지와 행동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인간의 가치가 개입됩니다(가치 함축적). 반면, 자연 현상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인간의 가치가 개입될 수 없습니다(물가치적). ㉠과 ㉢은 모두 사회·문화 현상으로서 가치 함축적입니다.
- ② (O) 확실성의 원리는 인과 관계에 예외가 없어 동일한 조건에서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연 현상(㉡)의 특징입니다. 반면, 사회·문화 현상(㉠)은 인과 관계는 존재하지만, 동일한 조건이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확률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 ③ (X) 사회·문화 현상(㉢)은 당위 법칙, 자연 현상(㉡)은 존재 법칙이 적용됩니다. 당위 법칙은 사회 현상이 '마땅히 ~ 해야 한다'와 같은 인간의 규범적 요구에 따라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존재 법칙은 자연 현상이 인간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단지 자연의 원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 ④ (X) 보편성과 특수성이 모두 나타나는 사회·문화 현상(㉠, ㉢)과는 달리 자연 현상(㉡)은 보편성만을 특징으로 합니다.

2. 「형법」상 죄형 법정주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원칙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 불문법인 관습법을 근거로는 처벌할 수 없다.
- ②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 범죄 행위가 형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때에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 ③ 명확성의 원칙 - 무엇이 범죄이고 그 범죄에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법률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④ 소급효 금지의 원칙 - 범죄 행위 당시 그 처벌 규정이 법률에 없었으나 범죄 행위 이후에 그 처벌 규정이 법률에 제정되었다면 반드시 소급하여 처벌해야 한다.

[정답] ④

[출제단원] 정치와 법 - V.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죄형 법정주의

| 출제 가능 지수 |  |  |  |  |  |
|----------|--|--|--|--|--|
| 난이도 지수   |  |  |  |  |  |

- ① (O)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법률주의)은 범죄와 형벌은 문서로 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불문법인 관습법을 근거로 어떠한 행위를 처벌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것은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 ② (O)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란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률 규정이 없을 때 법관이 그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형벌을 부과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것을 금하는 원칙입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 해석은 허용됩니다. 따라서 범죄 행위가 형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 ③ (O) 명확성의 원칙이란 입법자는 금지되는 범죄 행위와 형벌의 내용을 국민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법률에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률에는 범죄 행위가 무엇인지와 그 범죄에 부과되는 형벌이 무엇인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④ (X) 소급효 금지의 원칙(=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란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행위 전에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사후 입법으로 처벌하거나 형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예외가 허용됩니다. 그런데 범죄 행위 당시 그 처벌 규정이 법률에 없었으나 범죄 행위 이후에 그 처벌 규정이 법률에 제정된 경우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아닙니다. 따라서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따라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3. <보기>의 밑줄 친 「헌법」상 기본권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중 하나이다.)

<보 기>

갑(甲)은 과거 시민단체에서 인권 운동가로 활동했는데, 국가 기관이 갑(甲)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정당 및 사회 활동, 대인 접촉 관계, 집회 또는 시위 참가 활동 내역 등을 수집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A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갑(甲)은 B를 바탕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지친 심신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 근교로 이사를 갔지만 주변 공장으로 인한 환경 공해와 자동차 행상들의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 공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느껴 C 역시 침해 받고 있다.

- ① A는 소극적·열거적 성격의 권리이다.
- ② B는 국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이다.
- ③ C는 민주주의 이념 중 하나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기본권이다.
- ④ A는 B와 C의 보장과 실현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다.

[정답] ②  
 [출제단원] 정치와 법 - Ⅰ. 민주 정치와 헌법  
 [출제영역] 기본권의 종류

|          |  |  |  |  |  |
|----------|--|--|--|--|--|
| 출제 가능 지수 |  |  |  |  |  |
| 난이도 지수   |  |  |  |  |  |

A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관련되므로 ‘자유권’, B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제기과 관련되므로 ‘청구권’, C는 환경권과 관련되므로 ‘사회권’에 해당합니다.

① (X) 자유권(A)은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 영역에서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소극적 권리’는 맞습니다. 그러나 자유권(A)은 천부적·초국가적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자유권은 물론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까지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열거적 성격의 권리는 아닙니다.

② (O) 청구권(B)은 국가에 특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입니다. 또한 청구권(B)은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입니다. 이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또는 ‘절차적 기본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③ (X) 신체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다른 사람과 차별을 두는 것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기본권은 ‘신체의 자유권’과 ‘평등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는 ‘사회권’에 해당하므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기본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④ (X) ②번 해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기본권의 보장과 실현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는 자유권(A)이 아니라 청구권(B)에 대한 설명입니다.

4. <보기>의 (가), (나)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한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 기>

(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 개개인의 능력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곳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배치한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 뛰어난 직원도 지금의 조직 문화 속에서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모두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조직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 더 시급 합니다.

- ① (가)는 사회를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라고 본다.
- ② (나)는 사회 명목론이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개개인의 노력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사회의 독자적 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정답] ③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Ⅱ.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사회 실재론 vs 사회 명목론

|          |  |  |  |  |  |
|----------|--|--|--|--|--|
| 출제 가능 지수 |  |  |  |  |  |
| 난이도 지수   |  |  |  |  |  |

(가)는 개개인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전체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사회 명목론’에 해당합니다. (나)는 현재의 조직 문화 속에서 개인은 성과를 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집단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에 해당합니다.

① (X) 사회를 개인의 외부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나)의 입장입니다.

② (X) (나)는 사회 실재론에 해당합니다.

③ (O) 개인의 노력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개인의 능동성과 주체성을 강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회 명목론(가)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④ (X) 사회 실재론(나)에서는 사회는 개인들의 외부에 실제로 존재하면서 개인들로 환원될 수 없는 독자적인 특성을 가진 실체라고 보았습니다.

5. 관료제와 탈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관료제는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를 강조한다.
- ②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을 중시한다.
- ③ 탈관료제는 관료제와 달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 ④ 탈관료제는 업무 수행 방식의 표준화를 중시한다.

[정답]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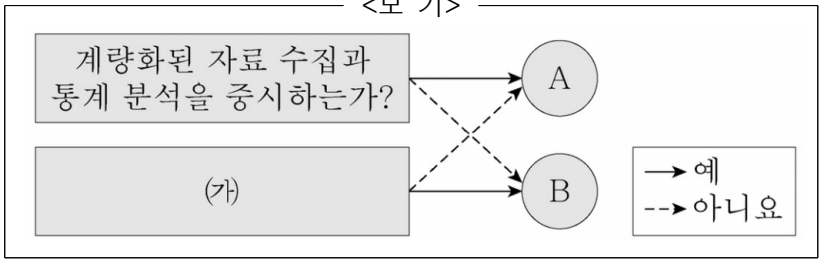
[출제단원] 사회·문화 - II.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관료제 vs 탈관료제

|          |  |  |  |  |  |
|----------|--|--|--|--|--|
| 출제 가능 지수 |  |  |  |  |  |
| 난이도 지수   |  |  |  |  |  |

- ① (O) 관료제는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를 특징으로 합니다.
- ② (X) 연공서열은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나 지위가 상승하는 것을 말합니다. 탈관료제는 연공서열보다는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을 중시하는 반면, 관료제는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을 중시합니다.
- ③ (X) 탈관료제와 관료제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 운영 체계로서, 탈관료제와 관료제 모두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 ④ (X) 관료제는 규칙과 절차에 따라 업무를 표준화하여, 구성원이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수행 방식의 표준화를 중시하는 것은 관료제의 특징에 해당합니다.

6. <보기>는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A, B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A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한 이해를 강조한다.
- ② B는 변인 간 관계에 대한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 ③ A는 방법론적 일원론, B는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 한다.
- ④ (가)에는 ‘경험적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정답] ③

[출제단원] 사회·문화 - I.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실증적 연구 방법 vs 해석적 연구 방법

|          |  |  |  |  |  |
|----------|--|--|--|--|--|
| 출제 가능 지수 |  |  |  |  |  |
| 난이도 지수   |  |  |  |  |  |

계량화된 자료 수집과 통계 분석을 중시하는 연구 방법은 ‘실증적 연구 방법’입니다. 따라서 A는 실증적 연구 방법, B는 해석적 연구 방법에 해당합니다.

- ① (X)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해 사회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방법은 해석적 연구 방법(B)입니다.
- ② (X) 수치화된 자료를 통해 변인 간 관계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법칙을 발견하는 연구 방법은 실증적 연구 방법(A)입니다.
- ③ (O) 실증적 연구 방법(A)은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의 연구 방법이 같다는 방법론적 일원론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 해석적 연구 방법(B)은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연구하는 목적과 방법도 서로 달라야 한다는 방법론적 이원론을 전제로 합니다.
- ④ (X) ‘경험적 관찰’은 연구자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실증적 연구 방법(A)과 해석적 연구 방법(B)은 연구자가 직접 연구 대상을 조사하고 관찰하는 방식으로 연구합니다. 즉, 두 연구 방법 모두 경험적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경험적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가’는 (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7. <보기>의 근대 사회 계약론자 갑(甲), 을(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 기>

▪ 갑(甲) : 자연 상태는 강제할 수 있는 선악의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자연 상태는 일종의 전쟁 상태이고, 인간이 자기 보존을 위해 자연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오히려 생명의 위협에 처하는 상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계약을 맺어 자연권을 포기하고 각 사람이 가지는 힘을 모아 좀 더 큰 집단적 힘을 가지는 정치 사회를 만든다.

▪ 을(乙) : 사람들이 계약에 따라 사회를 이룩한 것은 자연 상태에 대한 절망에서가 아니라 불편함 때문이다. 즉 자연 상태에서는 누구나 자연법의 집행권을 갖고 있으므로 자기 소유물을 지키는 데 불안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계약의 절차를 밟아 통치자를 세우는 데 동의하고, 또 통치자에게 자연권을 위임하는 동시에 자연권의 보호를 맡긴다. 통치자와 국민의 관계는 동의와 신탁 위에서만 성립한다.

- ① 갑(甲)은 국가가 사회 계약을 위반한다면 국민은 국가를 부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본다.
- ② 을(乙)은 국가 권력은 위임 목적에 맞게 행사되도록 분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③ 갑(甲)과 달리 을(乙)은 일반의지에 의한 통치를 강조한다.
- ④ 갑(甲), 을(乙) 모두 국가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간주한다.

[정답] ②  
[출제단원] 정치와 법 - 1. 민주 정치와 헌법  
[출제영역] 사회 계약설

|          |  |  |  |  |  |
|----------|--|--|--|--|--|
| 출제 가능 지수 |  |  |  |  |  |
| 난이도 지수   |  |  |  |  |  |

갑은 자연 상태를 일종의 전쟁 상태로 보고, 개인이 자연 상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계약을 통해 국가를 구성했다는 것이므로 ‘홉스’에 해당합니다. 을은 잠재적 투쟁 상태를 극복하고 개인의 생명과 재산·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을 통해 국가를 창설하고 개인이 가지는 권리의 일부를 국가에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로크’에 해당합니다.

① (X) 국가가 사회 계약을 위반할 경우 국민이 국가를 부정할 권리란 ‘저항권’을 말합니다. 홉스(갑)는 군주가 선포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있어도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보아 저항권을 부정했습니다.

② (O)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권력 분립을 통한 국가 권력의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리(=입법권 우위의 2권 분립)를 주장한 자는 로크(을)가 맞습니다.

③ (X) 인간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이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 ‘일반 의지’입니다. 계약을 통해 수립된 국가는 이러한 일반 의지의 명령에 따라 통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자는 ‘루소’입니다.

④ (X) 홉스(갑), 로크(을), 루소와 같은 사회 계약론자들은 모두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을 통해 국가를 구성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즉, 국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천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8. <보기>의 밑줄 친 ㉠~㉣ 중 혼인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혼인한 부부는 원칙적으로 함께 살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진다. 「민법」은 혼인하였더라도 ㉠ 부부가 각자의 재산을 따로 소유·관리·처분하는 부부 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은 명의가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부부 각자의 재산으로 본다. 부부는 공동생활에 필요한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 일상의 가사에 대해 상대방을 대리할 수 있다. ㉣ 일상의 가사에 대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지는 채무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부부에게 연대 책임이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정답] ②  
[출제단원] 정치와 법 - IV. 개인 생활과 법  
[출제영역] 혼인의 효과

|          |  |  |  |  |  |
|----------|--|--|--|--|--|
| 출제 가능 지수 |  |  |  |  |  |
| 난이도 지수   |  |  |  |  |  |

㉠ (O) 민법은 부부재산에 관하여는 부부 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 전에 취득한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 즉 그의 단독재산이며(제830조 제1항), 이러한 특유재산은 각자가 관리, 사용, 수익하게 됩니다(제831조).

㉡ (X)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30조 제1항). 이때 특유재산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를 대법원은 ‘추정’으로 해석합니다. ‘추정’이라는 것은 반대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이를 번복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간주’라는 것은 반대사실을 입증하더라도 간주된 효과를 번복시킬 수 없는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추정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강력한 효과를 갖는 간주로 보기 위해서는 법에서 “~로 간주한다.” 또는 “~로 본다.”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은 명의가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부부 각자의 재산으로 본다(=간주한다).’가 아니라, ‘부부 각자의 재산으로 한다(또는 추정한다).’라고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어느 정도의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만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금의 일부씩을 부담하여 매수하거나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한 것과 같은 유형적 기여가 있다면 그 명의와 상관없이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 (O) 민법은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27조 제1항). 이를 일상 가사 대리권이라고 합니다.

㉣ (O)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32조). 이를 일상 가사 채무의 연대책임이라고 합니다.

9. <보기>의 밑줄 친 ㉠과 관련하여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는?

— <보 기> —  
헌법은 법 위의 법이다. 헌법의 목적은 법을 만들고 실행하는 정치가나 관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거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러므로 ㉠ 의회에서 어떤 특정한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그 법안이 헌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가 함부로 헌법을 바꾸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헌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정되는 것이 아니며, 가장 기본적이고 신성한 영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① 탄핵 심판
- ② 권한 쟁의 심판
- ③ 위헌 법률 심판
- ④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정답] ③  
[출제단원] 정치와 법 - II. 민주 국가와 정부  
[출제영역] 헌법 재판소의 권한

|          |  |  |  |  |  |
|----------|--|--|--|--|--|
| 출제 가능 지수 |  |  |  |  |  |
| 난이도 지수   |  |  |  |  |  |

밑줄 친 ㉠은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말합니다.

- ① (X) 탄핵 심판이란 일반적인 징계 절차로써 파면시키거나 일반 사법 기관에서 소추하기 곤란한 대통령 등 고위 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의 탄핵 소추에 의하여 헌법 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 재판을 말합니다. 이는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위헌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② (X) 권한 쟁의 심판이란 국가 기관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및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에 권한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헌법 재판소가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역시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위헌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③ (O) 위헌 법률 심판이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헌법 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써 밑줄 친 ㉠과 관련한 제도가 맞습니다.
- ④ (X)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이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의 제소에 의하여 헌법 재판소에서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판하는 헌법 재판을 말합니다. 이는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위헌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10. <보기>에서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사례 발표로 보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 <보 기> —  
사회자 : 노동 관련법 위반과 관련한 피해 사례를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갑(甲) : 제가 다니는 회사는 임금을 주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 매출이 많을 때 주다 보니 임금 3개월치를 한꺼번에 받기도 합니다.  
▪ 을(乙) : 제대 후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하루에 12시간씩 일합니다. 일이 많아서 휴일도 없이 일주일 내내 일해야 합니다.  
▪ 병(丙) : 최근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다면서 여자들을 중심으로 해고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여자라는 이유로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 정(丁) : 회사가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이러한 경영 계획에 반대하고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위해 단체 교섭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 ① 갑(甲)
- ② 을(乙)
- ③ 병(丙)
- ④ 정(丁)

[정답] ④  
[출제단원] 정치와 법 - V.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근로자의 권리 보호

|          |  |  |  |  |  |
|----------|--|--|--|--|--|
| 출제 가능 지수 |  |  |  |  |  |
| 난이도 지수   |  |  |  |  |  |

- ① (O)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3조 제1항 본문). 따라서 갑이 다니는 회사에서 비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② (O)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50조).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53조 제1항).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제55조 제1항). 을은 휴일 없이 일주일 내내 하루 12시간씩 일한다고 하였으므로 1주간 근로시간이 84시간(=12시간 X 7일)이 됩니다. 따라서 법정 근로시간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일도 없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③ (O)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4조 제1항). 또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조 제2항). 따라서 병이 다니는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사유로 여성을 차별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④ (X) 단체 교섭이란 근로자가 단결하여 사용자와 「근로 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경영권이나 인사권에 관한 사항은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이 다니는 회사의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사업 영역 확장과 관련된 경영 계획에 반대하며 단체 교섭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1. <보기>의 (가)와 (나)가 각각 나타내는 사회 보장 제도의 일반  
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 기>

(가)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생계, 의료 등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나) 노령, 사망, 장애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고 기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와 고용주 등이 부담해서 마련한 기금을 통해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① (가)가 속한 유형은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나)가 속한 유형은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③ (가)가 속한 유형은 (나)가 속한 유형과 달리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④ (나)가 속한 유형은 (가)가 속한 유형과 달리 수혜 대상자가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정답] ②

[출제단원] 사회·문화 - IV. 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사회 보장 제도-사회 보험, 공공 부조

|          |  |  |  |  |  |
|----------|--|--|--|--|--|
| 출제 가능 지수 |  |  |  |  |  |
| 난이도 지수   |  |  |  |  |  |

(가)는 기초 생활 보장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공공 부조’에 해당합니다. (나)는 국민 연금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사회 보험’에 해당합니다.

① (X) 공공 부조(가)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 보장 제도는 사회 서비스입니다.

② (O) 사회 보험(나)은 사전 예방적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③ (X) 공공 부조(가)와 사회 보험(나)은 모두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만, 공공 부조(가)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사회 보험(나)은 상호 부조의 원리에 따라 가입 대상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공공 부조(가)에 비해 사회 보험(나)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작습니다.

④ (X) 사회 보험(나)은 수혜의 정도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과 같은 부담 능력에 따라 비용을 부담합니다. 공공 부조(가)는 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12. <보기>의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 기>

사회자 : 현재 경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갑 : ㉠ 소득세율을 인상해야 합니다.

▪ 을 : ㉡ 지급 준비율을 인상해야 합니다.

- ① ㉠은 금융 정책에 해당한다.

② ㉠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증가한다.

③ ㉡을 통해 통화량이 증가한다.

④ ㉠과 ㉡ 모두 총수요 감소 정책에 해당한다.

[정답] ④

[출제단원] 경제 - III. 국가와 경제 활동

[출제영역] 경기 안정화 정책

|          |  |  |  |  |  |
|----------|--|--|--|--|--|
| 출제 가능 지수 |  |  |  |  |  |
| 난이도 지수   |  |  |  |  |  |

① (X) 금융 정책(통화 정책)이란 중앙은행이 물가와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재할인율 정책이나 지급 준비율 정책, 공개 시장 조작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과 같이 세율을 조정해서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재정 정책입니다. 재정 정책이란 정부가 물가와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과 세출을 조절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세율의 인화와 인상, 정부 지출의 증가와 감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② (X) 세율을 인상하면 소득에서 정부가 떼어가는 몫이 많아지므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감소합니다.

③ (X) 지급 준비율이란 시중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에서 고객의 예금 인출 요구에 대비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지급 준비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면 예금액 대비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비중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통화량은 감소합니다.

④ (O) 소득세율을 인상하면 소비가 감소해서 총수요가 감소합니다.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면 통화량이 감소하고, 통화량 감소는 이자율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이자율이 인상되면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여 총수요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과 ㉡은 둘 다 총수요 감소 정책에 해당합니다.

13. <보기>는 금융상품 A~C를 질문을 통해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A~C는 각각 요구불 예금, 주식, 채권 중 하나이다.)

<보 기>

| 질문               | A   | B   | C   |
|------------------|-----|-----|-----|
| 만기가 있는가?         | 아니요 | 예   | 아니요 |
|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 아니요 | 아니요 | 예   |
| (가)              | 예   | 예   | 아니요 |

- ① A는 예금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② B의 발행 기관은 B를 발행할 경우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③ B와 달리 C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④ (가)에는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정답] ③

[출제단원] 경제 - V. 경제생활과 금융

[출제영역] 다양한 금융 상품

|          |  |  |  |  |  |
|----------|--|--|--|--|--|
| 출제 가능 지수 |  |  |  |  |  |
| 난이도 지수   |  |  |  |  |  |

「만기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B는 채권입니다.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C는 주식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A는 요구불 예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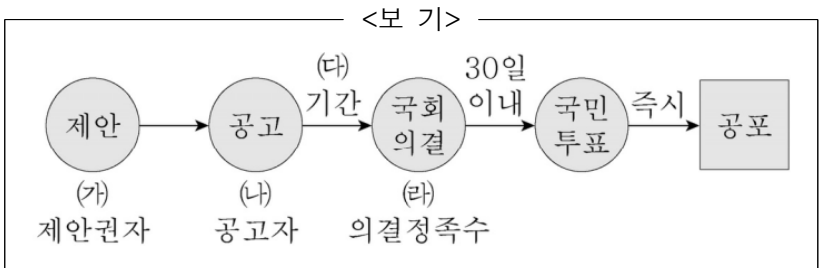
① (O)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요구불 예금이라고 합니다. 요구불 예금(A)을 포함한 예금은 예금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 보험 공사는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금융 회사를 대신하여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해줍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② (O) 채권(B)으로 조달한 자금은 만기에 갚아야 할 돈으로 타인 자본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권의 발행 기관이 채권을 발행할 경우 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③ (X) 채권(B)과 주식(C)은 둘 다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④ (O) 요구불 예금(A)과 채권(B)은 둘 다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주식(C)은 배당금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에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들어가면 요구불 예금(A)과 채권(B)은 ‘예’, 주식(C)은 ‘아니요’라고 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14. <보기>는 우리나라 헌법 개정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보기>의 (가)~(라)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통령

② (나) 대통령

③ (다) 60일 이내

④ (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정답] ①

[출제단원] 정치와 법 - II. 민주 국가와 정부

[출제영역] 헌법 개정 절차

|          |  |  |  |  |  |
|----------|--|--|--|--|--|
| 출제 가능 지수 |  |  |  |  |  |
| 난이도 지수   |  |  |  |  |  |

- ① (X)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됩니다(헌법 제128조 제1항).
- ② (O)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헌법 제129조).
- ③ (O)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합니다(헌법 제130조 제1항).
- ④ (O) 국회의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헌법 제130조 제1항).

15. <보기>는 경제 체제 A와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 중 하나이다.)

| <보 기>                              |     |     |
|------------------------------------|-----|-----|
| 질문                                 | A   | B   |
|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경제 체제와 관련이 있는가? | 예   | 아니요 |
| 개별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가?      | ㉠   | ㉡   |
| (가)                                | 아니요 | 예   |

- ① A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의 해결에서 형평성을 더 강조한다.
- ② B보다 A에서 경제적 유인 체계를 더 중시한다.
- ③ ㉠에는 ‘아니요’, ㉡에는 ‘예’가 들어간다.
- ④ (가)에는 ‘보이지 않는 손을 중시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정답] ②  
[출제단원] 경제 - 1.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출제영역] 경제 체제의 유형

| 출제 가능 지수 |  |  |  |  |  |
|----------|--|--|--|--|--|
| 난이도 지수   |  |  |  |  |  |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것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와 관련이 있는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따라서 A는 시장 경제 체제입니다.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부정하는 것은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와 관련이 있는 경제 체제는 계획 경제 체제입니다. 따라서 B는 계획 경제 체제입니다.

① (X) 시장 경제 체제(A)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의 해결에서 「효율성」을 더 강조합니다. 「형평성」을 더 강조하는 경제 체제는 계획 경제 체제(B)입니다.

② (O) 경제적 유인의 사전적 정의는 ‘경제적으로 이로운 행동을 하도록 사람을 부추기는 자극’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능력과 공헌도에 따른 차등 분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과에 따른 차등 분배를 중시하는 경제 체제는 시장 경제 체제(A)입니다.

③ (X) 개별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시장 경제 체제(A)입니다. 따라서 ㉠에는 ‘예’, ㉡에는 ‘아니요’가 들어가야 합니다.

④ (X) 보이지 않는 손을 중시한다는 것은 생산과 소비를 시장가격의 자율적인 조정 기능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시장 가격의 자율적인 조정 기능을 중시하는 것은 시장 경제 체제(A)입니다. 따라서 (가)에 ‘보이지 않는 손을 중시하는가?’라는 질문이 들어가면 시장 경제 체제(A)는 ‘예’, 계획 경제 체제(B)는 ‘아니요’라고 답해야 합니다.

16. <보기>의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
|---------------------------------------------------------------------------------------------------------------------------|--|
| 세금을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 납부하는 사람을 ‘납세자’라고 하고, 부과된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고 한다. 납세자와 담세자의 일치 여부에 따라 조세를 분류하면 ㉠ 간접세와 ㉡ 직접세로 나뉜다. |  |

- ① ㉠은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이다.
- ② ㉡은 주로 소비 지출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 ③ ㉠이 ㉡보다 조세에 대한 저항이 더 강하다.
- ④ ㉡이 ㉠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정답] ④  
[출제단원] 경제 - 1.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  
[출제영역] 직접세와 간접세

| 출제 가능 지수 |  |  |  |  |  |
|----------|--|--|--|--|--|
| 난이도 지수   |  |  |  |  |  |

- ① (X)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불일치하는 조세입니다.
- ② (X) 소비 지출에 부과되는 조세는 주로 간접세(㉠)입니다.
- ③ (X) 조세에 대한 저항이 강한 것은 직접세(㉡)의 특징입니다. 반면 간접세(㉠)는 조세가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세에 대한 체감 정도가 낮고, 상품 구매 포기를 통해 납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 ④ (O) 직접세(㉡)는 소득과 재산에 직접 조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율을 높이는 누진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큼니다. 반면에, 간접세(㉠)는 주로 소비에 부과됩니다. 소비에는 비례세가 적용되는데, 비례세는 역진성이 있어 소득 분배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세(㉡)가 간접세(㉠)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큼니다.

17. <보기>의 사례에 대한 「민법」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갑(甲, 만 17세)은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신형 스마트폰 판매자인 을(乙, 만 40세)과 고가의 스마트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甲)은 을(乙)과 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아직 매매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 ① 갑(甲)과 을(乙)의 계약은 당연히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② 을(乙)은 갑(甲) 본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권리를 갖는다.
- ③ 을(乙)은 갑(甲)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갑(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에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매매 대금이 완납되는 시점부터이다.

[정답] ③  
[출제단원] 정치와 법 - IV. 개인 생활과 법  
[출제영역] 미성년자의 계약, 계약의 성립

|          |  |  |  |  |  |
|----------|--|--|--|--|--|
| 출제 가능 지수 |  |  |  |  |  |
| 난이도 지수   |  |  |  |  |  |

- ① (X)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입니다. 즉, 일단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지만, 후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이 취소하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될 뿐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 ② (X)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확답 촉구권을 갖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확답 촉구권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면 그의 법정 대리인에게 행사해야 하며, 미성년자 본인에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사례에서 을이 미성년자인 갑 본인에게 확답 촉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 ③ (O)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미성년자 측에서 추인을 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의사 표시를 철회하여 계약의 성립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철회권)는 계약 당시 자기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미성년자였음을 몰랐던 경우(선의)에 한하여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사례에서 을은 갑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갑이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에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④ (X)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에 관한 의사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청약)와 이를 받아들이는 의사 표시(승낙)가 합치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계약금의 지급이나 계약서의 작성은 계약 성립의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시된 사례에서 매매 계약은 갑과 을의 의사 합의가 있을 때 성립하는 것이며, 매매 대금이 완납되는 시점에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성립 후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할 뿐이며, 계약 자체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8. <보기 1>과 관련된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1> —  
헌법재판소는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등의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특별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구(舊) 「문화 예술 진흥법」의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 <보 기2> —  
ㄱ.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ㄴ. 국가는 문화의 보호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ㄷ.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해야 한다.  
ㄹ. 의료,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①  
[출제단원] 정치와 법 - I. 민주 정치와 헌법  
[출제영역] 헌법의 기본원리

|          |  |  |  |  |  |
|----------|--|--|--|--|--|
| 출제 가능 지수 |  |  |  |  |  |
| 난이도 지수   |  |  |  |  |  |

- <보기1>은 문화예술진흥이라는 특정한 공익적 과제의 필요에 총당하기 위하여 공연장 등을 이용하는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강제적으로 특별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구 「문화 예술 진흥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공연관람자 등이 예술감상에 의한 정신적 풍요를 느낀다면 그것은 헌법상의 문화국가원리에 따라 국가가 적극 장려할 일이지, 이것을 일정한 집단에 의한 수익으로 인정하여 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헌법의 문화국가이념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하여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헌재 2003. 12. 18. 2002헌가2). 따라서 <보기1>과 관련된 헌법의 기본원리는 ‘문화 국가의 원리’입니다. 문화 국가의 원리란 국가가 문화를 보호하고 문화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개인의 문화적 생활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리를 말합니다.
- ㄱ. (O)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1조 제5항은 문화 국가의 원리와 관련된 헌법 규정입니다. 평생교육은 문화국가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적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ㄴ. (O)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9조는 문화 국가의 원리와 관련된 헌법 규정입니다.
  - ㄷ. (X)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제119조 제2항은 복지 국가의 원리와 관련된 헌법 규정입니다.
  - ㄹ. (X) 의료,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은 복지 국가의 실현 방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는 복지 국가의 원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9.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 기>

아래의 표는 갑(甲)국과 을(乙)국이 X재 1개와 Y재 1개를 각각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단, 양국은 X재와 Y재만을 생산하고 노동만을 생산 요소로 사용하며 양국이 보유한 노동자 수는 각각 100명이다.)

| 구분     | 갑(甲)국 | 을(乙)국 |
|--------|-------|-------|
| X재(1개) | 4명    | 2명    |
| Y재(1개) | 5명    | 4명    |

- ① 갑(甲)국은 Y재를 최대 25개 생산할 수 있다.
- ② 갑(甲)국의 X재 1개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Y재 5/4개이다.
- ③ 갑(甲)국은 X재에, 을(乙)국은 Y재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 ④ 을(乙)국은 X재 10개와 Y재 20개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

[정답] ④

[출제단원] 경제 - IV. 세계 시장과 교역

[출제영역] 무역 이론

|          |  |  |  |  |  |
|----------|--|--|--|--|--|
| 출제 가능 지수 |  |  |  |  |  |
| 난이도 지수   |  |  |  |  |  |

- ① (X) 갑국이 Y재 1개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자 수는 5명입니다. 그런데 갑국이 보유한 노동자의 수가 100명이기 때문에 20개 (=100÷5)의 Y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 ② (X) 주어진 표를 바탕으로 갑국과 을국의 X재, Y재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갑(甲)국 | 을(乙)국 |
|----|-------|-------|
| X재 | 4/5Y  | 1/2Y  |
| Y재 | 5/4X  | 2X    |

- 위 표에 따르면 갑국의 X재 1개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Y재 4/5개입니다.
- ③ (X) 위 표에 따르면 X재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작은 것은 을국이고, Y재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작은 것은 갑국입니다. 따라서 갑국은 Y재에, 을국은 X재에 비교우위를 가집니다.
- ④ (O) 을국이 X재 1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20명(=10개×2명)의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Y재 2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80명(=20개×4명)의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을국이 가진 100명의 노동력으로 X재 10개와 Y재 20개를 동시에 생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 <보기>의 (가)는 X재 시장의 상황을 나타낸다. <보기> (나)의 수요와 공급의 변동 요인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X재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로 가장 옳은 것은? (단, X재와 Y재는 모두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을 따른다.)

<보 기>

(가)

(나)

- 수요의 변동 요인 : X재와 대체재 관계에 있는 Y재의 가격이 상승하였다.
- 공급의 변동 요인 : 시설 설비의 첨단화로 인해 X재의 생산 기술이 향상되었다.

(단, 수요 곡선의 변동 폭이 공급 곡선의 변동 폭보다 더 크다.)

- ①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 ②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 ③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 ④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정답] ①

[출제단원] 경제 - II. 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시장 균형의 변동

|          |  |  |  |  |  |
|----------|--|--|--|--|--|
| 출제 가능 지수 |  |  |  |  |  |
| 난이도 지수   |  |  |  |  |  |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증가합니다. 따라서 X재와 대체재 관계에 있는 Y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X재의 수요는 증가합니다. 생산 기술이 향상되면 공급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X재의 공급은 증가합니다.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일단 균형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또한 수요 증가는 가격 상승 요인이고, 공급 증가는 가격 하락 요인입니다. (나)에 주어진 단서에서 수요 곡선의 변동 폭이 공급 곡선의 변동 폭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가격 상승 요인이 가격 하락 요인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균형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